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181 압류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조○○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7.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1978. 10. 24. 혼인신고를 마쳤고, 2024. 6. 1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B는 2002년, 2003년 귀속 주민세(종합소득분) 합계 99,130,330원(2023. 11. 27. 기준,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고 한다)을 체납하였다.

다.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23. 11. 27. 원고의 주소지인 ○○도 ○○시 ○○구 C(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주택에 B의 의류가 발견되었음을 근거로 그곳 안에 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2.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4.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6.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지방세의 채권은 피고가 B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한 2015. 7.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7.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이 사건 지방세 채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원고는 B와 2008년경부터 별거하면서 그 무렵 사실상 혼인관계를 종료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B와 원고의 공유재산이 아닌 별거 후 원고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는 지방세, 가산금 등의 납부의무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지방세, 가산금 등에 대한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는 위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의 이 사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D은행, E은행의 각 예금채권과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위 각 압류가 최종적으로 2023. 6. 5.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물건종류	압류설정일	압류물건	압류해지일	비고
예금	2008. 7. 28.	D 은행	2008. 10. 2.	추심충당
예금	2008. 7. 28.	E 은행	2023. 6. 5.	세무서와 경합사건('23.6월 추심)
자동차	2009. 5. 11.	(차량번호 1 생략)	2016. 12. 01.	차령초과말소
예금	2009. 5. 3 1.	D 은행	2013. 10. 24.	

그렇다면 이 사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2023. 6. 5.까지 중단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23. 6. 6.부터 다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방세징수법 제48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B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을 수색할 당시 이 사건 주택 안방의 옷장에서 B의 소유로 보이는 의류 및 속옷 등이 발견되었다.

나) B의 주민등록등본에는 B가 2013. 5. 20.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위 주민등록등본 상 B가 2013. 5. 21. '○○○○군 F'로, 2019. 6. 7. '○○시 G'으로, 2023. 11. 13. '○○시 H건물, I호'로 각각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가 원고와 B 사이의 자녀인 J이고, 그 중 일부 주소지(○○시 G)에는 지상에 가설건 축물만이 있을 뿐이다.

다) 원고와 B, J의 ○○청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상호	업종	사업장소재지
A	1992.01.01	1992.10.31.	K		○○ ○○구 L
B	1997.03.15.	2003.12.31.	M	귀금속	○○ ○○구 N
	2004.01.01.	2008.02.12.	(주) O	귀금속	○○ ○○구 P
J	2008.01.03.	2010.12.31.	Q	귀금속	○○ ○○구 P
	2010.10.29.	2011.06.03.	R (주)	귀금속	○○ ○○구 S, T 호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B의 주민등록등본 상 B는 이 사건 처분일에 근접한 2013. 5. 20.까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비록 그 후 주소지가 몇 차례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해당 주소지 또한 원고와 사이에 낳은 자식인 J 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에 해당하는데다가 일부 건물은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가설건축물로서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주소지에 이전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B의 옷가지가 발견되었던 것을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B와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 설령,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B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체동산은 가전제품과 다이아몬드 원석 등의 귀금속으로, B와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부부인 원고와 B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원고와 B, 아들 J이 오랜 기간 귀금속 도매업을 운영한 것을 볼 때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는 B와 2008년경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하였고,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하였거나 예물로 받은 이 사건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가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고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

판사 양○○

판사 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8

별지 1

목 록

연번	종류	압류물건	수량	비고
합계			332	
1	동산	LG TV	1	
2	〃	LG 세탁기	1	2023.8.28. 구매계약서 제출
3	〃	CUCKOO 공기청정기	1	
4	〃	ELECTROCOOL 냉장고	1	2023.8.28. 구매계약서 제출
5	〃	DIMCHAE 김치냉장고	1	2019.7.10. 고객카드 제출
6	〃	삼성냉장고	1	
7	〃	LIDOO 모니터	1	
8	〃	조립식 PC본체	1	
9	귀금속	0.13CT 다이아몬드	2	
10	〃	0.16CT 다이아몬드	4	
11	〃	0.17CT 다이아몬드	11	
12	〃	0.23CT 다이아몬드	2	1/ 1
13	〃	0.3CT 다이아몬드	2	
14	〃	0.32CT 다이아몬드	1	
15	〃	0.33CT 다이아몬드	1	
16	〃	0.36CT 다이아몬드	2	1/ 1
17	〃	0.5CT 다이아몬드	2	
18	〃	0.6CT 다이아몬드	1	
19	〃	0.63CT 다이아몬드	2	1/ 1
20	〃	은수저(수저,젓가락)세트	53	
21	〃	펜던트	4	
22	〃	금반지	3	
23	〃	귀걸이(다이아몬드)	1쌍	
24	〃	금팔찌	1	
25	〃	로렉스 시계	1	
26	〃	다이아 은 목걸이	1	
27	〃	진주귀걸이	12	
28	〃	다이아몬드 원석(개별포장비닐)	1	
29	〃	다이아몬드 원석(개별포장비닐)	1	
30	〃	다이아몬드 원석(개별포장비닐)	1	
31	〃	다이아몬드 원석(개별포장비닐)	3	
32	〃	다이아몬드 원석(개별포장비닐)	1	
33	〃	다이아몬드 원석(개별포장비닐)	2	
34	〃	다이아몬드 원석(개별포장비닐)	10	
35	귀금속	다이아몬드 원석(개별포장비닐)	10	
36	〃	다이아몬드	16	
37	〃	투명보석원석	25	
38	〃	다이아몬드	105	
39	〃	기념주화	43	
40	〃	보증서 9장		별도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지방세징수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
-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